

2019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2019년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운영보고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

Contents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소개	07
1. 옴부즈만 연혁	08
2. 옴부즈만 운영 현황	09
복지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3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14
가. 고충민원 현황	14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17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19
가. 수용 민원 사례	19
나.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22
다. 불가 민원 사례	31
라. 조사 중 해결 민원 사례	32



인권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34
가. 고충민원 현황	34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35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37
가.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37
나. 의견표명 민원 사례	42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활동 현황 및 자문위원

1. 복지옴부즈만 활동일지 및 활동사진	44
2. 인권옴부즈만 활동일지 및 활동사진	47
3.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홍보 현황	50
4.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	53

부 록

1.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현황	56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58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5
4. 국가인권위원회법	101
5. 고충민원신청서 서식	123



2019년은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구시는 2009년 전국 최초 복지옴부즈만을 시작으로, 2017년 대구시민의 인권을 위해 인권옴부즈만을 신설하여 옴부즈만제도를 특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대구시민의 복지와 인권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건전한 복지 및 인권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고충민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노인·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많았고, 인권 분야는 시설생활인의 경제적 문제와 사회복귀, 시설 내에서의 생활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민원 내용들을 토대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 그리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시한 이동상담소,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운영한 시민사랑방, 복지현장 방문을 통한 옴부즈만 운영 방향을 설정, 주 2회 대구시립희망원 3개 마을을 순회하여 진행한 인권 상담, 시설생활인과 생활 교사들의 고충에 따른 대안 제시 등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구시의 정책과 제도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받는 옴부즈만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의 그동안의 노력이 시민의 권익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9년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운영성과와 민원 처리 결과 등을 담은 본 운영보고서를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 대구시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시민이 제기하는 각종 민원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을 함께 하신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옴부즈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방 성 수**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 **이 명 주**



01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 소개



1. 옴부즈만 연혁
2. 옴부즈만 운영 현황

01 옴부즈만 연혁

- 2006. 12. 6.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 확정
- 2008. 12. 1. 「대구광역시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09. 3. 10. 제1대 복지옴부즈만(김현익) 임용
- 2009. 6. 8. 제1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7명)
- 2011. 5. 2. 제2대 복지옴부즈만(정정화) 임용
- 2011. 5. 30.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1. 6. 21. 제2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2. 5. 10.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2013. 5. 2. 제3대 복지옴부즈만(정정화) 재임용
- 2013. 6. 21. 제3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5. 5. 11. 제4대 복지옴부즈만(변창식) 임용
- 2015. 6. 21. 제4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7. 5. 10.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2017. 5. 11. 제5대 복지옴부즈만(변창식) 재임용
- 2017. 6. 21. 제5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7. 9. 11. 제1대 인권옴부즈만(이명주) 임용
- 2018. 1. 24. 제1기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9. 5. 21. 제6대 복지옴부즈만(방성수) 임용
- 2019. 6. 21. 제6기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위원 9명)
- 2019. 9. 11. 제2대 인권옴부즈만(이명주) 재임용

02 옴부즈만 운영 현황

가. 도입배경

1994년 중앙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에 따른 옴부즈만 기능일부가 도입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 제도를 복지영역에 특화를 하여 2009년 4월, 전국 최초로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실시하게 되었다.

복지옴부즈만은 대구시가 실시하는 복지행정에 대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를 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하여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복지현장의 부정부리를 근절하여 건전한 지역복지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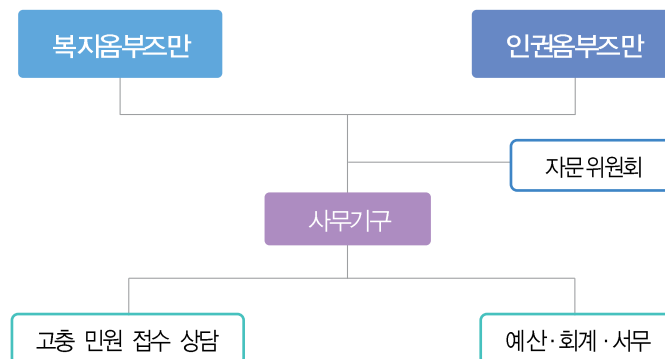
인권옴부즈만은 2017년 시립희망원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희망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 분야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설치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형태 및 조직

대구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행정부형으로, 의결방식은 독임제로, 자문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된다. 업무는 복지 및 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영역에 특화함으로써 행정부형 독임제 특수옴부즈만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직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각 1명, 자문위원 9명(위원장 포함) 행정지원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직무범위

대구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직무범위는, ① 행정기관(민간위탁기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나 개인이 수행한 복지 및 인권 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② 복지 및 인권 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③ 복지 및 인권 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④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 및 인권 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⑤ 복지 및 인권 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⑥ 복지 및 인권 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⑦ 그 밖에 복지 및 인권 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이다.

라. 관할기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①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② 자치 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③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④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복지 분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이다.

마.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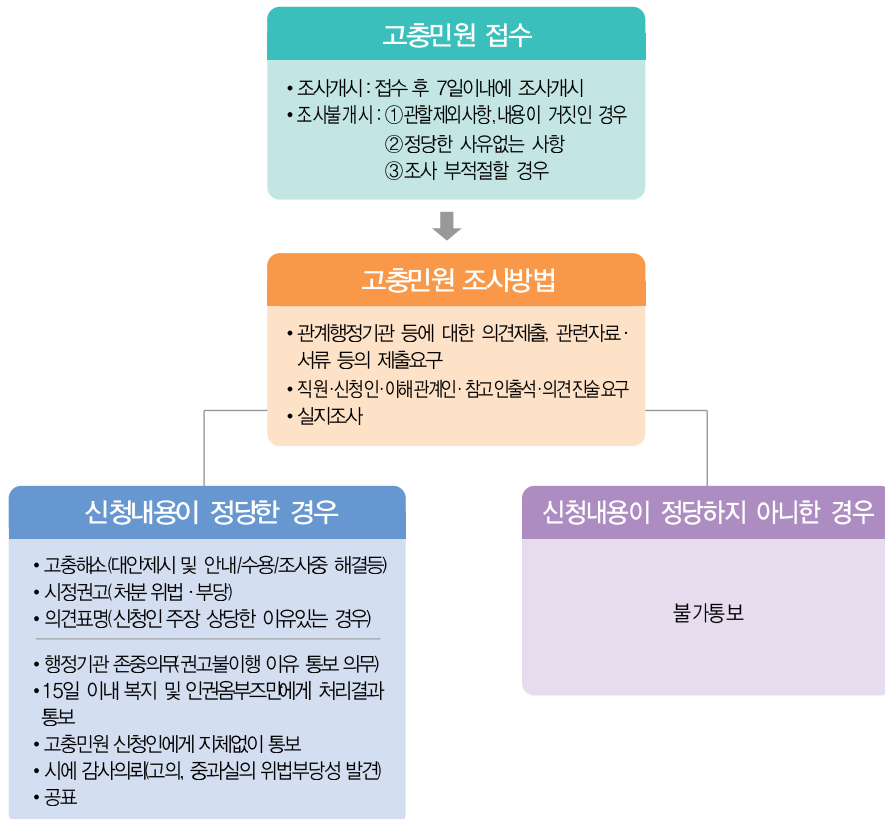
고충민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면,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가능하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조사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의견제출, 관련자료, 서류 등 제출요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조사사항과 관계있는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게 된다.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도개선 등 의견표명을 하게 되는데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하게 된다.



[고충민원 처리유형]

처리유형	내 용
시정 권고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
의견표명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합의의 권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 권고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민원의 경우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에 의해 조정서 작성
각하 또는 이송	판결 등에 권리 관계가 확정되거나 사안간의 권리관계에 속하는 사항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인권 대구 구현



02

복지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 가. 고충민원 현황
-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 가. 수용 민원 사례
- 나.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 다. 불가 민원 사례
- 라. 조사 중 해결 민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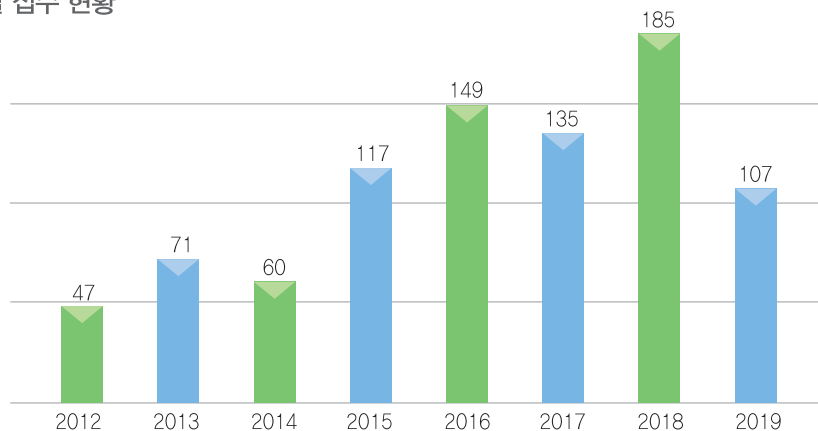
0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가. 고충민원 현황

1) 연도별 현황

구분	접수 건수	조 사 결 과 처 리 현 황												
		복지 분야								타 분야				
		소개	수용	대안 제시 및 안내	불가	조사 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중	권고·의견표명		소개	수용 및 안내	불가	조사 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중
2019	107	32	5	25	1	1	-	-	-	75	74	1	-	-
2018	185	56	9	41	2	3	-	1	-	129	119	4	5	1
2017	135	52	11	36	1	3	-	1	-	83	77	6	-	-
2016	149	48	17	23	7	1	-	-	-	101	90	9	2	-
2015	117	49	17	26	6	-	-	-	-	68	61	7	-	-
2014	60	53	11	22	13	1	-	4	2	7	7	-	-	-
2013	71	46	10	21	10	1	-	4	-	25	25	-	-	-
2012	47	47	6	21	10	5	-	3	2	-	-	-	-	-
2011	37	37	4	14	9	7	-	2	1	-	-	-	-	-
2010	44	44	3	13	11	12	-	3	2	-	-	-	-	-
2009	38	38	2	16	8	3	-	4	5	-	-	-	-	-

연도별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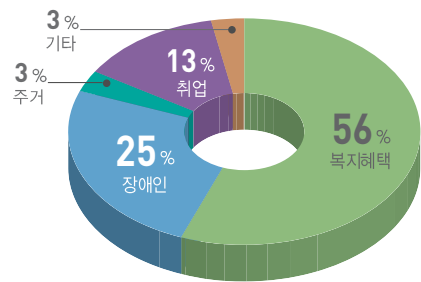


2) 고충민원 분야별 분석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 민원은 총 107건으로 이 중에 복지 분야는 32건이고, 타 분야는 75건으로 모두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1) 복지 분야 고충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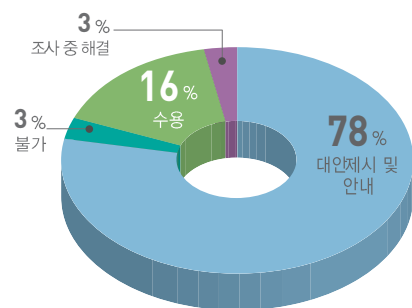
복지 분야에 접수된 고충민원 32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혜택 18건 5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관련 8건 25%, 주거 1건 3%, 취업 4건 13%, 기타 1건 3%이었습니다.



복지 분야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 현황

분류	복지혜택	장애인	주거	취업	기타	계
건수	18	8	1	4	1	32
비율(%)	56	25	3	13	3	100

복지 분야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행정 행위가 정당하여 신청인에게 불가통보를 한 민원이 1건 3%,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고충해결의 일환으로 대안 제시 및 안내를 한 고충민원이 25건 78%, 수용 처리한 고충민원이 5건 16%, 조사 중 해결이 1건 3%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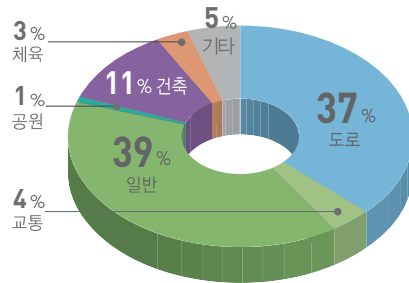
복지 분야 고충민원 분야별 처리 결과

분류	수용	불가	대안제시 및 안내	조사 중 해결	계
건수	5	1	25	1	32
비율(%)	16	3	78	3	100



(2) 타 분야 고충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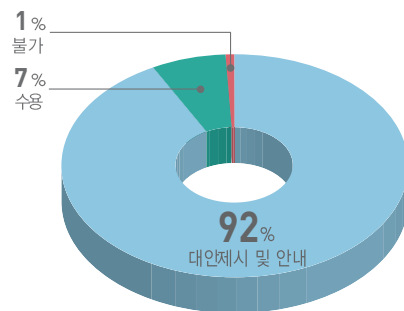
타 분야에 접수된 고충민원 75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28건 37%, 교통 3건 4%, 일반 29건 39%, 공원 1건 1%, 건축 8건 11%, 체육 2건 3%, 기타 4건 5%이었습니다.



타 분야 고충민원 접수 현황

분야	도로	교통	일반	공원	건축	체육	기타	계
건수	28	3	29	1	8	2	4	75
비율(%)	37	4	39	1	11	3	5	100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신청인에게 불가통보를 한 민원이 1건 1%,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고충 해결의 일환으로 대안제시 및 안내를 한 고충민원이 69건 92%, 수용 처리한 고충민원이 5건 7%이었습니다.



타 분야 고충민원 처리 결과

분류	수용	불가	대안제시 및 안내	계
건수	5	1	69	75
비율(%)	7	1	92	100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 복지 분야 |

신청취지	처리결과
대구시 마더박스	수용
긴급지원 요청 관련 민원	수용
장애인택시 나드리콜 이용대상 검토 문의	수용
노노케어 사업 탈락 관련 민원	수용
기초연금이 감액지급 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수용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문의	안내
2019년도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문의	안내
기초수급 혜택 관련 문의	안내
장기요양시설 이용 관련 문의	안내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안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안내
기초수급 관련 문의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신청 문의	안내
기초수급 가능한지요?	안내
노인일자리 사업 후보자입니다.	안내
뉴스와 언론에 보도 중인 북구의 선린복지재단 후원금 부정사용 건 민원	안내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선린복지재단의 인사 부정행위 신고 민원	안내
2인 가족 기초수급비 관련 문의	안내
주거비 지급 문의 및 후원자 연결 도움 요청 민원	안내
돌보미 관련 문의	안내
노인일자리 알선	안내
공무원연금 수령자 복지혜택 제도개선 건의	안내
후견인 선정 관련 문의	안내
노령연금 제도개선 건의	안내
기억학교 제도개선 건의	안내
생계곤란으로 인한 구직 도움 요청 민원	안내
어르신 케어 제도 안내 민원	안내
기억학교에 대한 문의	안내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관련 민원	안내
장애인랜프 관련 민원	안내
대구수목원 후문(2번 출구)에도 장애인 휠체어나, 어린이용 유모차가 출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가
장애인 주차시설 관리의 부당함 관련 민원	조사 중 해결



| 타 분야 |

분야	신청취지	처리결과
도로	탄력봉 설치 요청 건	수용
일반	대구차량등록사업소 내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설치 건의	수용
건축	불법 구조물 철거 요망	수용
건축	○○○○○아파트 정화조 배관 고쳐 주세요.	수용
공원	공원 청소 요청	수용
도로	민원을 공개하라 불법을 왜 숨기려고 하나?	안내
도로	대구 ○○택지지구 밖 도로 발파를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안내
도로	이상한 도로공사 조속한 해결 촉구합니다.	안내
교통	주차문제	안내
교통	대구시 체육회 건물 앞 도로 주차선은 체육회 직원 전용인가요?	안내
일반	누구를 위한 대구 도시공사인가요?	안내
일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요망	안내
일반	○○구청 교통소통지도사 사업 불합격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안내
건축	하자보수 및 면담요청	안내
건축	아파트 하자 보수 처리	안내
건축	대구 ○구 ○○동 민영개발	안내
건축	○○동 ○○○아파트 신축 반대	안내
건축	건축심의 부당합니다.	안내
건축	○○○주택조합 설립과정의 문제점 감사 요청	안내
체육	누구를 위한 레포츠 센터입니까?	안내
체육	시민 운동장 보조경기장 사용	안내
생활안전	가로등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안내
고용	계약직 고용보장	안내
환경	2019 노후경유차 시행공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요구	안내
토지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내
교통	아침등교시간 시지에서 경북대학교 가는 937버스를 증편해 주세요. 배차간격을 좁혀주세요.	불가

0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수용(일부수용) 민원 사례

대구시 마더박스

- **고충요지** : 4월 출산예정인 가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마더박스가 대구시에도 올해 부터 지원이 된다는 소식에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 군은 2018년 부터 마더박스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울시 ○○ 구 경우처럼 시 지원 선물과 구 지원 선물을 다 받을 줄 알았는데, 대구에 경우는 2개 중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더박스 지원 소식이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와 군의 마더박스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말에 속상합니다. 이왕 하시는 정책, 서울시 ○○구처럼 출산 가정에 더 베풀면 좋겠습니다.
- **처리결과** : 현재 출산지원정책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여 자체 예산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바, 지원정책 및 기준이 상이하며 적용범위 또한 당해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올해 1월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구·군에서는 별도의 출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대구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의 경우 재원이 시비와 구비가 함께 반영되었으며, ○○군의 경우 기존 사업에 시비가 포함된 형태로 양측이 별개의 사업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대구시 출산지원금과 ○○군 자체 출산축하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장애인택시 나드리콜 이용대상 검토

- **고충요지** : 나드리콜에 대해 건의를 합니다. 나드리콜 택시는 본래취지대로 교통약자에 대해 제공됨이 마땅하나 이용대상자 범위에서 65세 이상자에(노약자)대해서도 신청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 유형별 대상자 중 노약자가 매월 3%씩 증가됨에 따라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 허용으로 정작 이용해야하는 장애인들은 차량 부족으로 불편함과 이용자의 증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노약자에 대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해야한다는 조건(병원



진단서)으로 한정하여 제한되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면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처리결과** : 건의하신 65세 이상자(노약자)가 나드리콜 이용 시에, 병원 의사의 소견만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나드리콜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나드리콜 이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 뿐만 아니라 대구시 조례(시행규칙)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나드리콜 이용자 범위가 완화됨에 따라 나드리콜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나드리콜 차량 증차를 통해 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요청 관련 민원

- **고충요지** : 민원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지난 12월까지 행정도우미로 근무하였습니다. 한시적인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19. 1. 7. 기초수급 신청을 하였지만 임대료 2개월 관리비 3개월이 밀려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초수급 결정이 언제쯤 되는지, 그 전에 긴급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처리결과** : ○○읍 복지담당자 확인 결과 민원인은 기초수급으로 생활하다가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게 되면서 기초수급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후 계약기간 종료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기초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약 1개월간의 조회기간이 소요되어 2월 중순경 확정이 되었습니다. 긴급지원은 요건이 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이를 민원인이 수용하였습니다.

노노케어 사업 탈락 관련 민원

- **고충요지** : 2016년부터 노노케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사업 참여 대상 기준이 기초연금 수령자에서 기초연금 미 수령자로 변경되어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처리결과** : 시니어 클럽 사업은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노노케어 사업이 속하는 공익형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이고, 시장형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령과는 무관하게 선정(단 기초수급 제외)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민원인은 위의 두 사업이 아닌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하여 왔는데 재능 나눔 활동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민원인은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 한 것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고, 올해 재능 나눔 활동 지원자가 너무 많아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탈락 된 것이지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지급 되는 이유를 알고 싶다

- **고충요지** : 공직에서 퇴직 하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다 소진하였습니다. 현재 약 2억 원 정도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약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10만 원 밖에 주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처리결과** : 확인결과 민원인은 1995.3.11. 공무원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을 하였습니다. 2015년 기초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퇴직연금 일시불 수령자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으나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는 특례대상으로 지정하게 되고 이미 지급된 기초연금은 환수하고 그 후 산정 금액의 50%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2016.1.~18.12.까지 지금까지 수령한 기초연금 환수를 완료 하고, 19.1.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민원인은 부부 세대로 1인당 기초연금 25만 원의 80%인 20만 원을 수령하게 되나 특례대상자로 이 금액의 50%인 10만 원을 수령하게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문의

- **고충요지** : 지난 해 12월 말경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처리결과** : 관할 주민센터 확인 결과 민원인은 기초연금 신청자로 현재 금융재산 정보조회 중에 있고, 조회기간이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문의

- **고충요지** : 2019년도에 완화된 부양의무자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 **처리결과** : 2019년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정에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되고(부양의무 제외), 만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와 보호 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초수급 관련 문의

- **고충요지** : 아들 부부와 손자 2명과 함께 생활하는 5인 가족으로 아들 부부는 일용직 노동자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손자 2명 돌보기도 빠듯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처리결과** : 민원인은 아들 소유 22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아들 부부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5인 가족 기초수급 대상자 기준은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 동일 세대로 있는 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혜택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가구로 세대 분리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이용 관련 문의

- **고충요지** : 민원인은 기초수급자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지인이 돌보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시각장애 5급, 위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나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 **처리결과** : 65세 노인으로 뇌경색으로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요양원 이용을 위해 별도로 장애 등급을 받을 필요는 없고,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하면 요양점수에 따라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해도 별도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 **고충요지** : 84세 노모와 생활하고 있으며 상지 관절장애 5급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 **처리결과** : 모친과 생활하는 장애 5급이나 장애 정도가 경증이어서 별도가구 대상은 어려우나, 65세 미만으로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조건부 수급 가능성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결과 상담기록이 없어 담당 직원이 민원인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고충요지** : 독거노인으로 월 18만 원 월세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34세 아들이 있지만 10년 전에 이혼을 하여 따로 살고 있고 직업도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이 없어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 **처리결과** :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민원에 대하여 알린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민원인 상담을 하여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아들의 부양의무 능력 유·무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초수급 가능한지요?

- **고충요지** : 민원인은 암 투병중이고 아내는 뇌경색 장애인입니다. 3년 전 기초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아들이 부양의무자가 되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이혼을 하였고 빚도 많아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혜택이라도 받고 싶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합니다.
- **처리결과** :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상황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 결과 아직 전산 조회가 완료 되지 않아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니 확인 되는 대로 민원인에게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신청 문의

- **고충요지** :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장애 1급, 2급이시고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인데 두 분 다 일을 하실 수가 없기에 저라도 취업은 못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기에 복지 제도를 찾아보던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제도라는 것이 있기에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시청에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한 건지 이 제도가 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제도를 신청하면 정말로 4~5년 동안은 제가 부양의무자로 선택 안 되고 달마다 230만 원 정도는 월급을 받아도 부모님의 수급자 자격유지에 아무 상관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처리결과** : 문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제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2019년도 기준 월 258만 원 이하인 월 23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므로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로 별도가구를 신청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후보자입니다

- **고충요지**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하였는데 후보라고 합니다. 선정 기준이 어떤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처리결과** :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 대상자 점수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소득수준과 세대원 구성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민원인 소득은 다른 신청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자녀와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대 구성관련 점수도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2개 사업에 지원을 하였는데 지원자가 많은 지하철 안내는 후보 42번, 수목원 안내는 후보 5번인데 기존 근무자 결원이 있을 시 순서대로 충원을 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뉴스와 언론에 보도 중인 ○구의 ○○복지재단 후원금 부정사용 건 민원

■ **고충요지** : 2019년 ○○복지재단 1차 추가경정예산서의 잡지출 870만 원 잡지출의 내용은 일전 ○ 구청에서 복지재단이 ○○종합사회복지관의 물품을 유용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복지관 입구에 게재되어 있었으며 환수금액이 870만 원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아 일치하고 물품유용의 환수 금액을 복지재단의 수입내용 중 후원금의 사용이 확인됩니다. 그 이유는 임대수입 등의 수입은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외의 수입은 후원금입니다. 후원금 수입으로 물품에 대한 환수 금액 용처는 맞지 않는 부정사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 ○○복지재단 결산보고서(후원금사용명세서 112열의 인사노무 자문료 지출 11만 원) 위 내용의 금액도 후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후원금을 사용 시 부정사용임으로 환수 또는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처리결과**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1차 추가경정예산서의 잡지출 항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구입한 차량 매각대금을 공동모금회로 상환하기 위해 세입 편성하여 지출한 금액임을 증빙하였으며, 2018년 결산보고서 후원금 사용내역 중 인사노무 자문료 11만 원 지출건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및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에 따르면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란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지정후원금 중 직접비로는 지출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걱정 해 주셨듯이 지역복지의 발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금 사용의 적정성 및 후원금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복지재단의 인사 부정행위 신고 민원

■ **고충요지** :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복지재단의 인사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신고함



니다. ○○복지재단의 전 대표이사의 ○○○의 아들 ○○○은 현재 복지재단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정 인사정황이 확인되어 조치를 바랍니다. ○○복지재단은 자립생활 가정 사업을 2018년 ○구청으로부터 지정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사업을 운영할 직원을 뽑아야 하지만 전대표이사의 아들이었던 ○○○을 부정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립생활가정의 운영을 포기하자 어떠한 인사조치 없이 다시 법인직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부정 인사채용과 부정인사조치내용이 확인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인사발령 통보의 내용에 이미 ○○○이 내정됩니다. 그 후 2019자립생활가정취업공고를 2019년 1월 15일에 공고합니다. 이로써 내정 후 공고하는 부정인사채용이 확인됩니다.

- **처리결과** :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당 법인의 인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침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 가족 기초수급비 관련 문의

- **고충요지** : 기초수급자로 기초수급자이면서 지적장애 2급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각각 수령하던 수급비가 2인 가족이 되면서 얼마나 감소되는지와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되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 **처리결과** : 기초수급 1인 가족 생계비는 약 50만 원이고, 2인 가족은 약 84만 원으로 각각 1인 가족으로 있을 때보다 약 16만 원 줄어들며 그 외에 중복되는 지원은 일정부분 감소가 되나 아내가 받던 장애연금은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인 대상의 합동 무료 결혼식을 실시하고 있으니 희망할 경우 5월 중 모집하는 장애인 재활협회에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주거비 지급 문의 및 후원자 연결 도움 요청 민원

- **고충요지** : 민원인은 기초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2층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주인이 집수리를 잘 안 해 준다고 함) 주거비는 어떻게 받는지와 후원자와의 연결을 바랍니다.



- **처리결과** : 2019. 6. 5.(수),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민원인은 현재 기초 수급자로 매월 생계비 51만 원과 푸드마켓 이용권 3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양곡지원(10kg 1,980원 생계비에서 차감)과 병원치료 시 의료비 연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거비는 임대계약 후 계약서에 의한 임대료 지급이 되며, 후원자 연결은 현재 관할 동 후원자가 많지 않아 수급자 중 경제적으로 힘든 분과 차상위계층 위주로 우선 연결하고 있음을 안내를 하였습니다.

돌보미 관련 문의

- **고충요지** : 민원인은 현재 치매 어르신 돌보미를 하루 3시간 하고 있는데 외출하고 복귀하는 시간이 예정시간 초과 3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불편합니다. 즉 예정시간 초과 29분까지는 허용되나, 초과 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돌보미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시간제한은 부담합니다.
- **처리결과** : 제기하신 노인 돌보미 활동 후 복귀시간 30분 이내 제한 규정은 해당 요양기관의 자체 관리차원의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 등급자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요양기관의 소요된 제 비용(진료비 등)을 청구 시 지급하고, 필요시 지도점검을 수행하며, 문제발생 시에는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알선 문의

- **고충요지** : 평생을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후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일자리를 구하고자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처리결과** :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결과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마감이 되었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구 시니어클럽, ○구 가족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구직조건 및 절차 등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노령연금 제도개선 건의

- **고충요지** :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0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였는데 이로 인해 노령연금을 50%로 삭감되어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이 일시불로 수령하였고 생계비로 다 지출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노령연금을 50% 삭감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100%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 **처리결과** : 민원인에게 노령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기억학교 제도개선 건의

- **고충요지** : 장애4급인 민원인은 치매예방 차원에서 기억학교를 이용하고 싶은데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1일 1만 원의 이용료(○구 ○○기억학교)부담이 너무 큼니다. 국가차원에서 치매예방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커피 한 잔 비용 등)나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처리결과** : 민원인에게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에 현황파악 및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어르신 케어 제도 안내 민원

- **고충요지** : 96세 되신 시어머님 때문에 문의를 합니다. 어머님은 연로하셔서 일어나지를 못 하시고 화장실도 기어서 다니십니다. 앉고 눕기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계신 큰형님은 70세가 넘으셨고 몸도 불편하신데 나머지 다섯 형제들은 모두 타지에서 살고 있어서 보살펴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 일주일에 두세 번 집으로 어르신을 케어를 해 주시는 제도가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지역 ○○노인복지센터(9개소 중 선택)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 ○○동 관할담당 ○○노인복지센터에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기억학교에 대한 문의

- **고충요지** : 기억학교를 설립하는 절차와 방법, 지정 기준, 바우처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알고 싶고, 서비스대상, 서비스자격, 서비스 시간 및 횟수, 제공기간, 집단규모, 제공유형,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 지역사회서비스 홈페이지에는 기억학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처리결과** : 기억학교는 대구시만의 특화사업으로 노인건강증진과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를 도모하고자 2013년 4개소로 시작해서 2019년 현재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노인으로 주간보호서비스(9:00~18:00, 송영서비스 시간 포함),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매극복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관 신규지정은 사업예산 확보 시 수요조사 후 구·군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된 법인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로 설치신고 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관련 민원

- **고충요지** : 자녀에 대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주거급여확인서를 발급해주어서 거듭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니 상위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뒤 다시 같은 주거급여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자들이 업무를 잘 숙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두 사람에게 인사 조치를 내려주십사 민원을 제기합니다.
- **처리결과** : 담당자(○구청)를 통해 제출 필요한 유형의 증명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이 부분은 제도상에 개선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확인서도 4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차상위계층확인서'로 통일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한곳에 체크하여 발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에 차상위계층확인서 통합을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램프 관련 민원

■ **고충요지** : ○○구 ○동 아파트에 지난달에 기존에 있던 램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였는데, 새로 설치되어 좋을 거 같던 램프가 정말 황당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램프 상단에 계단이 2단 설치되어 정상적인 램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하여보니 복지과나 건축과에서는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재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구시청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이것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그래서 철거 하고 재설치를 하는데 높이 1m미만으로 하여 법상 문제가 안 되어서 지금과 같이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는 유모차를 사용하는 애기 엄마도 계시고, 나이가 드셔서 짐을 들지 못해 수레와 같은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단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램프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여 없애 버리든지 돈 들여서 설치하였는데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으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램프로 누군가 민원을 제기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돈을 들여 설치한 것이 사용도 못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처리결과** : 경사로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는 「대구광역시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지원)이 되었으며, 현재 설치된 규모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관리주체에 행정지도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가 민원 사례

대구수목원 후문(2번 출구)에도 장애인 휠체어나, 어린이용 유모차가 출입할 수 있게 바람

■ **고충요지** : 대구수목원 정문 쪽에는 계단이 있으나 장애인 휠체어나 어린이용 유모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 출입길이 있으나, 현재 대구수목원 후문(2번 출구)에는 출입을 계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 휠체어나 어린이용 유모차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과 같이 동일하게 후문(2번 출구)도 장애인 휠체어나 어린이용 유모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이 아닌 평지의 길을 만들어주셔서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도 불편함 없이 대구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처리결과** : 제기하신 대구수목원의 제2문은 당초 주변 등산로를 연결하는 통로 및 비상문으로 설치되었으며, 2문 안쪽에 계단이 있는 비탈면은 급경사지인데다 비탈면 녹화와 지반 안정을 위해 수목들이 식재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곳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할 정도로 완만한 기울기(지그재그식 등)로 설치하고, 아울러 노약자가 아닌 일반인을 위한 계단을 함께 설치하려면 일정 사업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기존 수목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사로 조절과 수목 이전,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조치가 어려우나 향후 소요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경과 : 2020년 수목원 제2출입구 경사로 설치 사업 예산 편성으로 사업이 확정됨〉



조사 중 해결 민원 사례

장애인 주차시설 관리의 부당함 관련 민원

■ **고충요지** : 시청 앞 국채보상로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이곳으로 출근하고, 아버지 또한 이곳으로 출근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십니다. 그래서 항상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하 1층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항상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몇 번은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조금 어이가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신고를 당한 비장애인 차의 차주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곤란' 하다고 관리사무실에 말을 했나봅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의 민원에 대해서 구청이 '곤란'을 겪을 이유가 있습니까?

■ **처리결과** : 조사 중 해결(본인 취하)

03

인권 분야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가. 고충민원 현황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가.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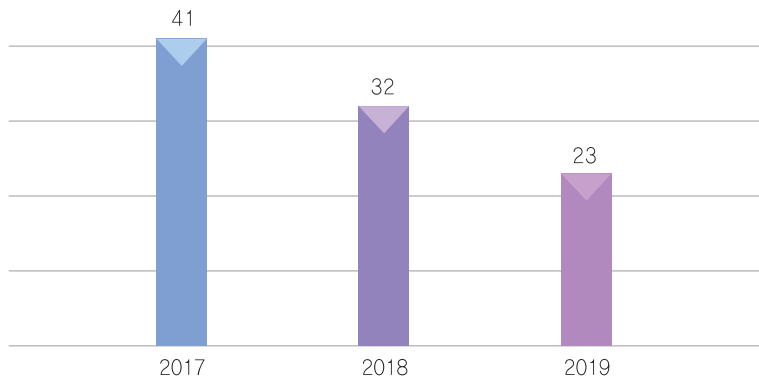
나. 의견표명 민원 사례

01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요약

가. 고충민원 현황

구분	접수 건수	조 사 결 과 처 리 현 황												
		인권 분야								타 분야				
		소개	수용	대안 제시 및 안내	불가	조사 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중	시정 권고 의견표명		소개	수용 및 안내	불가	조사 중 해결	조사 (처리) 진행중
2019	23	12	-	11	-	-	-	1	-	11	11	-	-	-
2018	32	14	-	12	-	-	-	2	-	18	18	-	-	-
2017	41	14	-	14	-	-	-	-	-	27	27	-	-	-

연도별 접수 현황



※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인권 분야 고충민원 평가

2017년 9월 인권옴부즈만 제도가 시행한 이후 최근 3년간의 인권 관련 고충민원은 위와 같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 생활교사들의 인권 교육 강화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자문상담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시설 스스로의 인권 의식 변화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인권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 인권 분야 |

신청취지	처리결과
외출 후 미복귀한 생활인에 대한 상담	안내
생활인 간의 성 문제 자문	안내
퇴소를 희망함	안내
생활인들의 생활교사에 대한 폭력	안내
생활인 간의 마찰 발생 시 무조건 112에 신고해야 하는지 자문 요청	안내
생활인이 물 컵으로 물을 던져 사과 받고 싶음	안내
생활인의 자유 허용 범위	안내
공격성이 강한 생활인이 다른 생활인과 생활교사를 괴롭힘에 대한	안내
건강상 식사 조절이 필요한 생활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음식을 지급해도 되는지 자문	안내
외출이나 퇴소를 희망함	안내
생활교사의 생활인에 대한 폭언	의견표명



| 타 분야 |

신청취지	처리결과
생활인 연고자(고모)의 생활인 부모 장례비용 청구	안내
생활교사의 불친절	안내
자립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안내
시민마을 탈시설(폐쇄) 후 생활하기가 불안하고 속상함을 토로	안내
자진퇴소한 생활인의 연고자가 대구시에 항의전화를 함	안내
시설이 생활인의 이성 관계 개입 여부	안내
생활인이 생활교사를 좋아하여 지속적으로 구애를 함	안내
한 명의 생활인의 욕구가 강하여 다수의 생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하는지	안내
퇴소한 생활인의 금전관리를 시설에서 해도 되는지	안내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생활인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여부	안내
생활교사가 생활인의 mp3를 돌려주지 않음	안내

※ 비교 : 생활인 당사자 상담이 8건, 생활교사 상담 및 자문이 15건으로 생활교사의 상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점차 인권에 대한 사전 예방 측면이 증가되는 추세로 평가 됨.

02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 결과

안내 및 대안제시 민원 사례

외출 후 미복귀한 생활인에 대한 상담

■ **고충요지** : ○○○○에서 거주하는 생활인이 1월 2일 외출 후 복귀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자 시설에서는 외출 시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진 퇴소임을 생활인의 연고자에게 알렸으나 이에 생활인의 연고자는 정신증이 있는 생활인을 외출을 보낸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을 절대 나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시설과 인권음부즈만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인의 연고자는 생활인이 시설로 복귀한다면 강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생활인의 연고자는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통해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였으며 정신과 치료를 한 후 연고자가 통제가능한 정신요양시설로 전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인의 연고자는 ○○○○ 외에 다른 시설로 전원하게 될 경우 추가 비용이 드는지 문의하였고 생활인이 외출 후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로원 등 ○○○○ 외에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인은 연고자에게 전화로 생활인이 30인분의 설거지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 **처리결과** : ○○○○은 노숙인요양시설이므로 생활인 본인이 외출을 원할 경우 외출이 가능해야 하며 외출을 금지하는 것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된다고 안내를 하였으며, 더불어 정신증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정신요양시설로 전원하여 본인에게 맞는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였고,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어렵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인이 노숙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시설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면 연고자가 생활인의 정신병원 입원이나 정신요양시설로의 전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가정법원에 후견인 절차를 밟아 후견인이 된 이후에 법적으로 생활인을 건강상 케어 할 수 있도록 입원이나 시설 전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시설수급자인 경우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현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30인분의 설거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확인한 결과, 자치위원회를 통한 자발적 행동이었다고는 하나, 자치위원회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1월 7일부터는 직원과 공익요원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시설 내 생활인 간의 성 관련 문제 자문

■ **고충요지** : ○○○○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생활인이 매점 앞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여, 그 시간대 주변 CCTV를 살펴보니 전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생활인은 정신과 상담 중이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에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생활인은 가해를 했다고 지목한 남성 생활인에게 오해였다고 사과를 한 후 다른 남성 생활인을 가해자로 다시 지목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생활시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적장애가 있는 생활인이 다른 생활인을 음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 **처리결과** : 시설에서는 생활인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통하여 생활인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처방을 하거나 생활인에게 맞는 시설로 전원을 하는 등 생활인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자체 매뉴얼 제작 등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퇴소를 희망함

■ **고충요지** : 생활인의 현재 가족은 아버지, 남동생 2명, 언니 1명이 있으며 2018년 겨울 언니가 마지막으로 면회를 왔고, 현금은 7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1주일에 두 번 정도 퇴소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에는 엄마가 약을 타러 가자고 해서 오게 되었으며 그 후로 계속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퇴소를 시켜주기를 희망합니다.

■ **처리결과** : ○○○○담당자에게 확인결과, 생활인은 현재 장애등급은 없으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중인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침에 의하면 자진퇴소 희망시, 퇴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연고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시설에서 개입하여 생활인과 합의하여 퇴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연고자와 확인한 후 개입하여 퇴소 절차를 논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인들의 생활교사에 대한 폭력

■ **고충요지** : ○○○은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거주시설입니다. 지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생활하다보니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생활인들도 많고,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생활교사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는 생활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인들의 공격적 성향과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생활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 **처리결과** : 생활인의 인권만큼 생활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생활교사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시설차원에서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시설에서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먼저 피해 생활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 교사에게 대하여 상담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안정을 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은 하고, 또한 동료 교사들과 충분히 상황을 공유하여 피해 발생 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동료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생활인의 자유 허용 범위

- **고충요지** : 상담인은 현재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항상, 생활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생활인의 경우 생활인들이 지역사회의 적응을 위해 자유롭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동네 산책 등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적 장애인의 특성상 마트에 가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또한 산책을 하다보면 시설차원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지도하여도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날 위험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권적 차원에서 지적 장애인에게도 자유를 많이 허용하고 싶은데 자유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뒀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 **처리결과** :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서는 주변 마트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별도의 장부를 정리하여 시설 생활인이 무단으로 물건을 가져갔을 경우 후불로 지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시설 내에서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하여도 지속 반복적으로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생활인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더욱더 면밀히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관찰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생활인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112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자문 요청

■ **고충요지** : 시설에서 생활하다보면 생활인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여 작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미비한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112에 신고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 **처리결과** : 생활인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우선 생활인 간의 분리를 통한 안전이 우선이며 이후 해당 생활인들을 진정시킨 다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관찰일지 등으로 문서화하여 정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무조건적인 112 신고보다는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소집하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여 생활인간에 화해를 시키거나 중재시키기를 안내하였습니다. 폭력이 발생한 경우, 생활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우선이므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한 후에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112에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생활인이 물 컵으로 물을 던져 사과 받고 싶음

■ **고충요지** : 폭행을 당한 생활인은 32세, 지적1급이며, 2018년에 ○○○○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생활인이 때려요.”라는 말로 상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처음 맞았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표현을 하였고, 선생님이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 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때렸는지 물어보니, 물 컵으로 물을 던졌다고 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 상담 당시 폭행을 당한 생활인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외출을 한 상황이어서 폭행을 한 생활인이 돌아오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물 컵의 물을 던지게 확인되면 사무팀장 입회하에 폭행을 한 생활인이 폭행을 당한 생활인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장 및 생활교사에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생활인이 다른 생활인과 생활교사를 자주 괴롭히는데 대안이 없는지

■ **고충요지** : 7년 차 사회복지사로 ○○○○에서 근무한지는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25세 여성 생활인 한 명은 공격성(때리고 꼬집는 등)이 강하고 이에 대하여 인지도 어느 정도 있지만 언어 표현이 안 되며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이 생활인은 불특정



다수인과 생활교사, 생활인에게 공격적인 생활을 자주 보이며, 특히 몇몇의 생활인에게는 강도가 아주 심합니다. 몇 해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정신과 상담을 통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설에서는 정신과 상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인에 대하여 제재도 해 보았지만 개선되지는 않고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는 ‘행위제한 외에 시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도 해 보았지만 별 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 **처리결과** : 정신과 상담을 진행한다고 해서 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인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인권침해(건강권)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논의하고 고민하는 건 아주 긍정적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한 달 동안 해당 생활인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한 후 결과가 좋지 않거나 더 나빠질 경우 보호자와 상의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기를 안내하였습니다.

건강상 식사 조절이 필요한 생활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음식을 지급해도 되는지 자문

- **고충요지** :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간경화의 위험이 있는 생활인이 의사 처방에 따른 식사 조절 등에 응하지 않고 식탐이 많아 음식의 양 조절 없이 계속 음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운동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킨다면 인권침해가 되는지를 알고 싶고, 또한 의사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계속 요구할 경우 음식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권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 **처리결과** : 생활인의 욕구를 무조건 충족시켜주는 것이 인권이 아닙니다. 생활인의 인권의 기본은 의식주의 충족에 있지만 건강권 역시 중요한 인권입니다. 따라서 생활인의 건강상태에 맞게 음식을 조절하고 일정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부터 강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조금씩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예컨대 운동량을 충족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방법: 생활인의 컴퓨터 사용시간을 늘이는 등) 생활인의 식탐과 욕구가 강하다고 하여 생활인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 표명 민원 사례

생활교사의 생활인에 대한 폭언

■ **고충요지** : 지난 주말 생활관에서 혼자 근무를 서는 생활교사가 생활인에게 폭언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폭언을 일삼지 않지만 주말이나 혼자 근무를 서는 날엔 생활인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폭언을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 본 생활교사도 있고, 이 상황을 전해들은 생활교사도 다수 있었습니다. 작년(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나 설문 문항의 표적문제로 조사결과에 대한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 **처리결과** : 관리감독 부서 담당 주무관과 함께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과정에서 해당 생활교사에게 이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장소의 CCTV 확인 및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교사들의 면담을 통하여 일부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행정지도 공문(의견표명)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과 대구사회서비스원 해당 시설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04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활동 현황 및 자문위원



1. 복지옴부즈만 활동일지 및 활동사진
2. 인권옴부즈만 활동일지 및 활동사진
3.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홍보 현황
4.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

01 복지옴부즈만 활동일지 및 활동사진

복지옴부즈만 활동일지

월	일	내용	비고
1	4	이동 민원상담소 운영	반월당역
	29	2018년도 업무보고	시장·의장
2	11	2018년도 운영보고서 배포	복지 및 인권 관련 부서 및 기관
	15	이동민원 상담소 운영	메트로지하상가
	19	대구수목원 고충민원현장 답사	대구수목원
3	12	대구사회복지협의회 홍보 및 업무협약차 방문	대구사회복지협의회
	28	제1차 복지옴부즈만 자문 회의	대구시청
	29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이동민원실(행복민원과와 협업)	반월당역 만남의 광장
4	26	이동 민원상담소 운영	메트로지하상가
5	21	제6대 복지옴부즈만 임용	
	31	이동민원 상담소 운영	경상감영공원
6	5	행복복지센터 민원조사 및 의견청취 방문	성내3동 행복복지센터
	7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일자리팀 의견청취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10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 업무협약차 방문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
	12	이동 민원상담소 운영	달성공원
	19	대구시 의회 정례회	대구시 의회
7	28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이동민원실(행복민원과와 협업)	수성구청역
	2	고충민원처리 워크숍	국민권익위원회 창원컨벤션센터
	10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이동민원실(행복민원과와 협업)	영대병원역
	19	전국 옴부즈만 회의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역회의실
	31	제2차 복지옴부즈만 자문 회의	대구시청
8	19	대구 동구옴부즈만실 업무협약차 방문	대구 동구옴부즈만실
	20	대구여성자립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차 방문	대구여성자립통합지원센터
	22	대구노인복지협회 업무협약차 방문	대구 노인복지협회
9	3	대구사회복지대회 참석	문화예술회관
	6	달서구 사회복지의 날	웃는 얼굴 아트센터
	17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이동민원실(행복민원과와 협업)	대실역
	20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큰마당 참석	회원명곡체육공원
	26	제3차 복지옴부즈만 자문 회의	대구시청
10	15	중구 복지마당 참석	2.28공원
	16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이동민원실(행복민원과와 협업)	아양교역
	31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참석	서울프레스센터
11	5	대구중구시니어클럽 업무협약차 방문	중구시니어클럽
	7	대구시 의회 행정감사	대구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	본리종합복지관 방문	본리종합복지관
	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 2020희망나눔캠페인 발대식	동성로 광장
	25	대구YMCA 업무협약차 방문	대구YMCA 청소년위원회
12	10	인권기념식 참석	대구인권위원회·대구시민행복교육국
	17	제4차 복지옴부즈만 자문 회의	대구시청



복지옴부즈만 활동사진



전국 옴부즈만 협의회



대구사회복지대회



전국 옴부즈만 회의(신문기사)



경상감영공원 이동 민원상담소



아양교역 시민사랑방



수성구청역 시민사랑방





복지옴부즈만 활동사진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



대실역 시민사랑방



경기도 옴부즈만 직원 견학 방문



영대병원역 시민사랑방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02 인권음부즈만 활동일지 및 활동사진

인권음부즈만 활동일지

월	일	내용	비고
1	9	경북대(인문대학) 협의 간담회 참석	경북대학교
	28	달구벌 종합복지관 인권교육참관	달구벌 종합복지관
	29	2018년도 업무보고	시장·의장
2	11	2018년도 운영보고서 배포	복지 및 인권 관련 부서 및 기관
3	11	대구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간담회	대구지방검찰청
	1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참석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
	13	제1차 인권음부즈만 자문위원회	대구시청
	15	2019년 감사업무담당 공직자 워크숍 참석	경북 경주
	25	제1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대구시청
4	1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참석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18	광주광역시청·전주시청 방문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광주시청·전주시청
	24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워크숍 참석	전주한옥마을
5	10	해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시설 지도 점검	해인단기보호시설(북구)
	29	요한의 집 방문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 점검	요한의 집(동구)
6	12	카리스타 남구 보금자리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 점검	카리스타 남구 보금자리(남구)
	13	대구인권교육센터 인권증진 워크숍 참석	대구인권교육센터(중구)
	21	대구경북연구원 정책토론회 참석	대구경북연구원(남구)
	26	제2차 인권음부즈만 자문회의	대구시청
	29	제11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인권보호단 참석	동성로(중구)
7	15	장애인자립지원협의회 회의 참석	대구사회서비스원(중구)
	17	인권취약 현장 방문	대구쪽방상담소(서구)
	19	인권도시 대구 만들기 토론회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19	대구인권익식 및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참석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8	9	인간존중을 위한 노인 인권 교육	노인인권실천연대
	26	인권증진위원선정 심사 관련 회의	대구시청
9	11	제2대 인권음부즈만 재임용	
	25	제3차 인권음부즈만 자문회의	대구시청
	2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정책 토론회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
10	22	대구인권익식 실태조사 관련 그룹집단 인터뷰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8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경찰관 인권강의	대구지방검찰청
11	7	대구시 의회 행정감사	대구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4	대구인권익식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참석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18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아동권리보장 토론회 참석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
	21	전국인권보호관 협의회 워크숍 참석	광주시 의회
12	5	범일초등학교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범일초등학교(수성구)
	10	세계인권 선언일 기념식 참석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16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 인권 토론회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18	제4차 인권음부즈만 자문회의	대구시청



인권옴부즈만 활동사진



아동 권리보장 세미나(신문 기사)



대구 쿼어문화축제 현장인권보호단



제1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상담



대구 경북연구원 정책토론회(신문 기사)



사회복지시설 상담





인권옴부즈만 활동사진



인권옴부즈만 자문 회의



대구 범일초등학교 인권 교육



인간존중을 위한 노인 인권 교육



사회복지시설 상담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03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홍보 현황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 민원·소통·참여 >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소개 > 직무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 시민이 행정기관(행정안전부, 시·도·군·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책,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 불편, 불합리, 또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복지 및 인권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장·경매 또는 의견표명 등 그 내용의 공표
- 복지 및 인권분야 행정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그 내용의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복지 및 인권분야 민원에 대한 조정 중재
- 복지 및 인권분야 집단민원의 조정 중재
- 기타 복지 및 인권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와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단, 이미 수사, 감사,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두드리소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민원신청 화면

두드리소 두드리소란? 민원신청 제안신청 120달구별콜센터 찾아가는 민원 커뮤니티

민원신청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제안을 도와드립니다.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OMBUD

다른 사람의 대리인 (스웨덴어)
조선시대의 신문고
호민관 '護民官', 민정관 '民情官'

스웨덴어로 다른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서를 살려낸 제도적으로는 조선시대 신문고제도에 가깝고, 굳이 호칭으로 보면 호민관(護民官), 민정관(民情官)이 적절할 듯 합니다.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복지행정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 관련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일반민원,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는 두드리소(민원, 제안 통합창구)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신장하신 개인 전자우편으로 답변해 드리며, 전자우편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나의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옴부즈만 리플릿

복지신문고

내가 받아야 할 **복지혜택**이 궁금하십니까? >>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십니까? >>

복지제도나 행정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까? >>

복지신문고를 올려주세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산격동, 시청별관)101동 1층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실
 * 인터넷접수 : 복지옴부즈만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ombudsman> 두드리스 <http://dudeuriso.daegu.go.kr>
 * 전화접수 : (053)803-2360, 2362-4 팩스접수 : (053)220-2363

간접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 주소특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특자의 휴·폐업
- 주소특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
- 돌스 확기초생활보장사업 연계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인권옴부즈만 리플릿

대구광역시 **인권 옴부즈만**
사회적 약자의 인권지킴이

Daegu Metropolitan City Human Ombudsman
사회적 약자의 인권지킴이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인권 분야 고충민원 상담·조사 Q&A

Q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 침해해 대상으로 하나요?
A 인권옴부즈만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 및 처리 권한을 가집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제3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의 정보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A 대구시청 홈페이지 www.daegu.go.kr에서 민원·소통 참여 >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으로 들어가면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청 별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01동 1층 인권옴부즈만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소통과 혁신의 **대구**
<https://dudeuriso.daegu.go.kr>

대구광역시 **인권 옴부즈만**
인권 분야 고충민원 상담·신청 안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지킴이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복지옴부즈만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홍보

대구광역시 현장 민원상담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모든 민원을 한자리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9년 상반기 운영일정

일 시	장 소
3. 29.(금)	반월당역 만남의 광장
4. 19.(금)	대곡역(도시철도 1호선)
5. 15.(수)	홈플러스 칠곡점(아외광장)
6. 12.(수)	내당역(도시철도 2호선)
6. 28.(금)	수성구청역(도시철도 2호선)
7. 10.(수)	영대병원역(도시철도 1호선)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오전10시 ~ 오후4시 30분

상당분야 및 참여기관

상당분야	상담내용	참여기관
세 금	자동차세, 재산세, 부가세 등 세금 전반	대구지방국세청, 구·군 세무부서
국 민 연 금	국민연금 자격·급여분야, 노후설계 등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소 비 자 상 담	의류, 가전, 통신 등 소비자 피해구제	대구시 민생경제과
금 융 상 담	금융소비자 민원·포털 이용, 금융 정보	금융감독위원회 대구경북지원
학 자 금 대 출	대학생 학자금 대출, 학자금 이자 지원 등	한국장학재단
생 활 법 률	가사, 민사, 형사, 화생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사 회 복 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복지 옴부즈만 홍보 등	대구시 감사관, 구·군 복지부서
보 건 건 강	혈압·혈당측정, 폐활량 검사, 보건·건강상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구·군 보건소
보 훈 복 지	보훈대상자등록, 보훈 선양	대구지방보훈청
병 무	병역, 모병,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이행과정 전반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건 강 보 험	건강보험 자격·부과·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생 활 불 편	도로, 교통, 소음, 쓰레기 등 생활불편민원 신고	대구시 행복민원과
도 시 주 택	무허가건축물, 재건축, 재개발 등 건축민원	구·군 건축부서
전 기 · 상 수 도	전기요금 감면제도, 상수도 요금, 누수탐지 등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일 자 리	취업상담 및 알선, 사회참여 지원 등	대한노인회취업·원스톱일자리 지원센터
평 생 학 습	대구시민대학 강좌, 평생학습 상담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
도 서 교 환	도서 추천, 독서경진대회 안내 홍보 등	새마을문고 대구시지부

대구광역시 ☎ 120(달구벌콜센터)

04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

복지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근무처	임기
위원장	방 성 수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19.6.21~'21.6.20
위원	차 보 현	영진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17.6.21~'19.6.20 '19.6.21 ~'21.6.20
위원	송 유 미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6.21~'19.6.20 '19.6.21 ~'21.6.20
위원	박 미 숙	청명장기요양센터 센터장	'19.6.21~'21.6.20
위원	이 민 욱	(주)벙커하우스 대표	'19.6.21~'21.6.20
위원	윤 봉 현	대구공업대학교 외래교수	'19.6.21~'21.6.20
위원	이 기 량	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6.21~'21.6.20
위원	권 은 주	여성신문사 대구경북지사장	'19.6.21~'21.6.20
위원	정 광 모	변호사	'19.6.21~'21.6.20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근무처	임기
위원장	이 명 주	인권옴부즈만	'18.1.24~'20.1.23
위원	송 진 옥	송마음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18.1.24~'20.1.23
위원	윤 상 철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소장	'19.5.16~'20.1.23
위원	장 민 철	대구쪽방상담소장	'18.1.24~'20.1.23
위원	김 종 신	영진전문대학교 서비스마케팅과 교수	'18.1.24~'20.1.23
위원	허 문 길	전) 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 소장	'18.1.24~'20.1.23
위원	백 경 록	전) 대구 YMCA 기획실장	'18.1.24~'20.1.23
위원	박 정 민	법무법인 참길 변호사	'18.1.24~'20.1.23
위원	김 진 희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	'18.1.24~'20.1.23

05

부록



1. 지방자치단체 ombudsman 현황
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ombudsman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 국가인권위원회법
5. 고충민원신청서 서식

01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현황

(2019.11월 기준)

연번	지자체	위원 수	명칭	소속	비고
1	서울특별시	7(상임1, 비상임6)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시장직속)	합의제
2	서울 강동구	3(비상임)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감사담당관실	독임제 (분야지정)
3	서울 강북구	5(비상임)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감사담당관실	독임제
4	서울 관악구	3(비상임)	관악구 옴부즈맨	감사담당관실	합의제
5	서울 구로구	3(비상임)	구로구 옴부즈맨	감사실	합의제
6	서울 동대문구	2(비상임)	동대문구 옴부즈만	감사담당관실	독임제
7	서울 마포구	3(비상임)	마포구 옴부즈만	감사담당관실	합의제
8	서울 서대문구	5(비상임)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담당관실	합의제
9	서울 성동구	7(비상임)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담당관실	합의제
10	서울 은평구	3(비상임)	은평구 옴부즈만	감사담당관실	합의제
11	서울 양천구	3(비상임)	양천구 옴부즈만	감사담당관실	독임제
12	서울 동작구	3(비상임)	동작구 옴부즈만	감사담당관실	합의제
13	대구광역시	2(상임)	복지·인권옴부즈만	감사관실	독임제
14	대구 북구	2(비상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실	합의제
15	대구 동구	3(비상임)	동구 옴부즈만	감사실	합의제
16	인천 미추홀구	3(비상임)	미추홀구 옴부즈만	감사실	합의제
17	광주광역시	50(비상임)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시장직속)	합의제
18	광주 광산구	9(비상임)	시민권익위원회	감사실	합의제
19	대전광역시	30(비상임)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감사관실	합의제
20	울산광역시	5(상임)	시민신문고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시장직속)	합의제
21	울산 울주군	5(비상임)	군민권익위원회	기획예산실	합의제
22	경기도	7(비상임)	경기도 옴부즈만	조사담당관실	합의제



(2019. 11월 기준)

연번	지자체	위원 수	명칭	소속	비고
23	부천시	2(비상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감사관실	독임제 (분야별 운영위원배치)
24	안양시	1(비상임)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자치행정과	독임제
25	시흥시	1(상임)	시흥시 시민호민관	감사담당관실	독임제
26	화성시	3(비상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감사관실	합의제
27	여주시	9(비상임)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홍보감사담당관실	합의제
28	성남시	1(비상임)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감사관실	독임제
29	남양주시	5(비상임)	남양주시 옴부즈만	감사관실	합의제
30	안성시	5(비상임)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 (시장직속)	합의제
31	수원시	5(비상임)	수원시 시민가디언	감사관실	합의제
32	용인시	7(비상임)	용인시 옴부즈만	감사관실	합의제
33	파주시	3(상임)	파주시 옴부즈만	감사관실	합의제
34	평택시	1(비상임)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항만경제전략국	독임제
35	강원도	9(비상임)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총무행정관)	합의제
36	원주시	7(비상임)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관실	합의제
37	강릉시	7(비상임)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행정국	합의제
38	충청남도	9(비상임)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위원회	합의제
39	충북 제천시	10(비상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장직속)	합의제
40	충북 영동군	10(비상임)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실	합의제
41	경북 상주시	1(비상임)	상주시 옴부즈만	공보감사담당관실	독임제
42	경남 양산시	3(비상임)	양산시 옴부즈만	감사관실	합의제
43	전북 익산시	5(비상임)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담당관실	합의제
44	전남 여수시	2(비상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소통담당관 (시장직속)	합의제

02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10.]

[대구광역시조례 제4960호, 2017.5.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의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복지행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 인권옴부즈만”이란 시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인권분야”라 함은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과 연구 및 행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회활동 분야를 말한다.

제3조(설치)

-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복지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옴부즈만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한다.
- ②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이하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라 한다)은 각 1명을 두되 지방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복지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제6조 각 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한 복지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복지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3. 복지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5. 복지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6. 복지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7. 그 밖에 복지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②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거주자가 제6조 각 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한 인권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인권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3. 인권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인권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5. 인권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6. 인권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7. 그 밖에 인권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직무관할 제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경찰·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관할기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복지분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

제7조(자격 요건 등)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8.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사회복지관련 석사학위 또는 인권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9.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10.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인권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민사회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채용계약, 채용기간 등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보장)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를 위반하여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이외의 직을 겸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9조(겸직금지)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법 제2조에 따른 각종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자문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2명,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자문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수당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 ① 시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시의 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분야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과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자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 ③ 고충민원의 신청은 대리인으로도 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이첩)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해당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 조사방법)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권고 및 의견 표명)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충민원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조치결과의 통보)

- ① 제16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통보받은 고충의 조사결과를 고충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공표 등)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18조 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 사유
- ② 기타 고충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다.

제21조(사무기구)

- ① 시장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사무기구 직원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 ③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민원조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④ 전문조사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공인의 사용)

- 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등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대구광역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운영상황 제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은 매년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으로 임용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 5. 10 조례 제4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60호, 2017.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옴부즈만으로 임용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19.10.17]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 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권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5.)
-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2.17.>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8.>
- ⑤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4.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4.16.>

제19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9.]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4.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6.>

제36조(사무기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자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 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 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16.>
- [제목개정 2019.4.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4.17.>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16.>
-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 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9조(신고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1. 차관급 이상의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제60조(조사결과와 처리)

-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사실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6.]

[중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4.16.>]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 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 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16.>

[본조신설 2016.3.29.]

[제목개정 2019.4.16.]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4.1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 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4.16.]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4.16.〉
-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신설 2019.4.16.〉

[제목개정 2019.4.16.]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4.16.〉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4.16.〉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4.16.〉
-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4.16.〉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 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 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제목개정 2019.4.16.]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 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 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6.]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3.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3.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 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 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제목개정 2016.3.29.]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9.]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 29.>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5. 28.>
-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2017.10.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2017.10.31., 2019.4.16.>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2016.3.29.>

[제목개정 2016.3.29.]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4.16.]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2019.4.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설 2019.4.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부칙 〈제16324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4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6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및 제70조의2(보상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6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를 “신고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로 한다.

04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16.2.3]

[법률 제14028호, 2016.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 보호소
 -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6. 2. 3.>
 -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 [전문개정 2011. 5. 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위원은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19.]

제11조 삭제 <2005.7.29.>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사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15조(자문기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6조(사무처)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①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①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19.]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19.]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3조(청문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 ⑥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7조(인권도서관)

- ①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②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③ 삭제 <2012. 3. 21.>
- ④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2. 3. 21.]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



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3.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2005.7.29.>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 ⑦ 소속공무원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6조(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 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5.19.]

제37조(질문·검사권)

- ① 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39조(진정의 기각)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19.]

제40조(합의의 권고)

-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19.]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19.]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5.19.]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① 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장 보칙 <개정 2011. 5. 19.>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6장 벌칙 <개정 2011.5.19.>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 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1조(비밀침해)

제31 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 7. 2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4028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직무상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지명 및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인 사람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지명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선출·지명하거나 임명할 당시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을 선출·지명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 제5항에 따른다

2019년도 복지 및 인권옹부즈만 운영보고서

발 행 일 | 2019년 12월

인 쇄 일 | 2019년 12월

발 행 처 |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옹부즈만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01동 1층

전 화 | 053)803-6233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Ombudsman>

이 보고서는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옹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운영상황 제출)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활동실적을 대구광역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19
복지 및 인권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http://www.daegu.go.kr/Ombudsman>